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도모연 | 영남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결사체(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 및 비정치적 결사체(종친회 · 동창회 · 향우회, 동호회, 친목모임)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과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중에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참여의식을 경유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었으나,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의 경우는 참여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만 발견되었다.

주제어 | 2016년-2107년 촛불집회, 정치적 결사체, 비정치적 결사체, 시민성, 사회적 자본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153). 2017년 6월 30일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특별학술회의 발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임.

1.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를 규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결사체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과 시민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사체 활동의 시민성 함양 효과를 강조한 사회자본론의 전통을 수용하여, 결사체 활동의 순기능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2016년-2017년 촛불집회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대규모 시민의 정치적 저항행위가 정치권력의 퇴진을 이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¹⁾ 더불어 이전의 촛불집회와 달랐던 평화적 진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거리 정치 혹은 광장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경우, 초기에는 평화로운 진행과 함께 인터넷의 다음 아고라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행위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시위대와 전경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여 폭력시위의 양상으로 변질되었고, 6월 이후부터는 민주노총 등의 사회 조직이 집회를 주도하면서 일반 시민의 촛불집회 참가도 줄어들었다(이현우 2008). 반면,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대규모 인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폭력적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고,²⁾ 조직적 동원의 성격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양상이 지속되었다.³⁾ 특히 노동조합과 정당의 깃발과 함께 펄럭였던 ‘한국곰국연합회’, ‘얼룩말연구소’, ‘전국 고급시계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29일(1차)부터 2017년 3월 11일(20차)까지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약 16,562,290명이었다.

2) 20차 촛불집회까지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는 3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23명뿐이었다(노형일 · 양은경 2017).

3)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일차적인 조사대상이었던 664명의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촛불집회 참가 계기에 대해 자발적인 결정과 판단(381명, 57.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홍보의 영향(219명, 33.0%), TV와 온라인 정보의 영향(32명, 4.8%), 가족 및 지인의 권유(29명, 4.4%), 기타(3명, 0.5%)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촛불집회의 동반자에 대해서는 가족(269명, 40.5%), 친구(197명, 29.7%), 혼자(155명, 23.3%) 직장동료(27명, 4.1%), 사회단체 회원(13명, 2.0%), 기타(3명, 0.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화물운송연합' 등의 깃발은 조직에 동원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상징이었다.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2016년-2017년 촛불집회가 조직적 동원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된 집합적 저항행위였다는 특성에 주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결사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결사체에 참여하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한 독려 혹은 압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연구는 개인의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결사체 활동과 결사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성 함양 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 혹은 관여(engagement)는 촛불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unconventional participation)와 제도적 정치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Verba et al 1995). 반면, 합리적 선택 이론의 집합행동의 딜레마는 조직에 속한 개인이 정치참여와 같은 공공재 획득에 참여하기보다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Olson 1965). 이 경우 사회자본론은 결사체 활동이 호혜적 규범과 신뢰의 제고를 통해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집합행동의 딜레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Putnam 2001). 즉 결사체 활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신장시키는 시민성 함양과 함께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결사체 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관용, 신뢰, 공동체의식 등의 시민성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의식을 배양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자본론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수용하여,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를 분석한다. 즉 평상시 결사체 참여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다. 첫째,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함양시키고 촛불집회 참여를 이끄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결사체 활동은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이끄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해답을 도출한다. 둘째,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결사체 활동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와 같은 정치적 결사체와 종친회·동창회·향우회, 친목회 및 동호회와 같은 비정치적 결사체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해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중에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사체 활동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의 관계 및 촛불집회의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을 수용한 경험적 연구들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제도적 및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으나,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결사체 활동이 시위나 집회 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결사체 활동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⁴⁾ 따라서 이 연구는 결사체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와 촛불집회를 포함한 정치참여의 유인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촛불집회 혹은 시위와 집회의 일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건을 도출한다.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시위와 집회가 시민들의 항의 표출의 장이 아니라 이익 표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촛불집회를 포함한 거리의 저항행위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한 조건으로 결사체 활동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4)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남자, 젊은 세대, 진보적 이념 및 정당, 호남 지역(이갑윤 2010), 탈물질주의(조기숙·박혜윤 2008), 정치효능감과 국가신뢰(이지호 2017), 분노의 감정(이현우 2017)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였다.

II. 개념 정의, 이론적 및 경험적 논의 검토

1. 결사체, 시민성, 촛불집회

1) 결사체: 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맥키버(Maclver)는 결사체(association)와 공동체(community)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공동체를 지리적 경계를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공유하는 인적 단위로, 결사체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한정적이고 인위적인 사회 활동의 단위로 정의하였다(Maclver 1970; 권효림 2015 재인용). 공동체에 대한 허스트(Hirst)의 분류에 기초할 경우 공동체는 계급, 인종, 종교와 같이 태어나면서 혹은 저절로 부여받는 운명에 의한 공동체(Communities of fate)의 성격이 강한 반면, 결사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공동체(Communities of Choice)의 성격을 가진다(Hirst 1993). 따라서 공동체가 가족, 민족, 이웃과 같이 선천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라면, 결사체는 회사,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같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튀니스(Tonnies)의 고전적 구분에 의하면 전자는 공동사회로 후자는 이익사회로 정의된다(Tonnies 1957).

사회자본론에서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결사체를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고 있다. 즉 일차적 관계(primary relations)에 기초한 조직과 이차적인 관계(secondary relations)에 기초한 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장수찬 2004). 전자는 혈연, 학연, 지연 및 친교와 같은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결사체를 의미하며, 후자는 노동조합 및 전문가·직능 집단, NGO 등과 같이 공식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결사체를 포함한다. 일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 결사체는 구성원 상호 간의 연대적 이익(solidary benefit)의 추구가 결사체 형성과 유지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반면, 이차적인 관계에 기초한 결사체는 연대적 이익과 함께 이념적 이익(expressive or purposive benefit) 혹은 물질적 이익(material benefit) 역시 결사체 형성과 유지의 중요한 동기이며,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사체적 이익집단(associational interest group)의 성격을 가진다.⁵⁾

2) 시민성: 정서적인 측면의 시민적 태도

교육이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민성 연구들은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자질, 즉 공동체가 요구하는 도덕적 행위 혹은 책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성은 일반적으로 시민적 지식(civic knowledge), 시민적 기능(civic skills),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를 포함한다(최종덕 2007; Print and Coleman 2003). 시민성 관련 국제비교연구인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역시 이상적인 민주시민의 정치적 자질을 인지(knowledging, reasoning and analysing), 정서(attitude, value belief) 그리고 행동(behavior, behavior intention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Schulz et al 2010).

결사체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도덕적 책임감, 상호신뢰, 관용, 법의 준수 등과 같은 시민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민성을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로 정의하여, 정서적인 측면의 시민성을 결사체 활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좋은 시민의 자질로 상정하였다. “지식과 지식에 대한 요구는 참여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에 뒤따른다”는 바버의 주장처럼(Barber 1984), 참여 활동을 통해 습득되는 시민적 태도는 시민적 지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참여 활동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을 가지면서 강한 지식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도묘연 2010).

시민적 태도로서 시민성을 정의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공동체의식, 참여의식, 신뢰를 좋은 시민의 자질로 제시하고 있다(나은경 2007; 도묘연 2010; 이용교 · 이중섭, 2010). 관용의식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 관념 및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용인하고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며,

5) 결사체 혹은 이익집단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에 의하면, 연대적 이익은 조직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재미, 동료의식, 사회적 지위 및 위신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념적 이익 역시 대의 명분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행동에서 도출되는 무형의 보상을 가리킨다. 반면, 물질적 이익은 올슨의 선택적 유인과 관련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수입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보상을 의미한다(Walker 1991).

이 경우 관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집단 내 의사결정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허인숙·이정현 2004). 신뢰는 사회 구성원을 포함해 공적 기관에 대해 갖는 집합적 믿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태도이다. 이 경우 신뢰는 자기편의 사람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가 아니라 면대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일반 신뢰(generalized trust)를 의미한다(Putnam 2001). 참여의식은 선거, 공공기구의 운영, 공공문제의 해결 등의 공적 영역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하려는 심리적 태도로(김영인 2007), 공동체 구성원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시민적 덕목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및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느끼는 귀속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익정신과 공동체 규범과 관련된 질서의식 또는 준법의식 등 공동체 이익에 도덕적으로 헌신하려는 의식과 태도를 의미한다(이승종 1997).

3) 촛불집회: 비제도적 정치참여로서 집합적 저항행위

촛불집회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방식 중의 하나인 항의집회(protest)이며, 시민 불복종의 일부인 정치적 저항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이현우 2008). 정치참여는 정부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투표 및 유세활동은 제도적 참여로, 그리고 거리의 시위나 집회, 서명 운동, 파업 및 점거 활동,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가입, 불매운동 등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된다(김욱 2013; Milbrath and Goel 1977; Norris 2002). 정치참여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제도적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비제도적인 차원으로 정치참여의 연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법 집회 및 시위, 공과금 납부 거부, 파업, 통행 방해, 공공건물 점거 등의 저항적 참여행위 역시 정치참여의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Kaase and Alan 1979). 한국의 촛불집회 역시 저항적 정치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저항행위로서 촛불집회는 대규모의 집합적인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다소 일시적인(episodic)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운동과 차이를 가진다(Tarrow and Tilly 2007; 이준한 2009).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사회운동은 연속적이고 조직화된 집합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반면, 촛불집회는 고착화된 정치적·사회적 문제보다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집합적 저항행위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스페인의 분노한 자의 운동(EI movimiento 15M)과 미국의 월가 점령운동(Occupy Wall Street), 2014년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Sunflower Student Movement)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졌던 집합적인 저항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촉발되는 집합적 저항행위는 반응적 집회, 새로운 감정적 집회(new emotional movement) 혹은 유발성 집회(valence movement)로 정의될 수 있다(Walgrave and Manssens 2000). 이 경우 분노와 불만과 같은 감정적 요인은 조직의 소속 유무를 떠나 개인의 집합적 저항행위의 동원과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이현우 2017).

한국 사회에서 촛불집회는 평화적 저항행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촛불 집회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미국의 반전 운동가들의 주도로 대학생과 시민들이 의회 앞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비폭력 및 평화적 시위를 벌이면서 집합적 저항행위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였다(한기덕 2012). 한국에서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이·미선이 사건’ 추모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직접적 혹은 집합적 저항행위의 전형으로 상징화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시위의 축제성과 정치성 간의 결합”이었다는 평가처럼(백옥인 2008), 촛불집회는 문화제와 결합되어 촛불문화제의 형식으로도 개최되고 있다.

2. 결사체 활동의 정치참여 확장 가능성: 시민성 함양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전통적으로 개인의 결사체 가입과 활동은 제도적 및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은 물적 자원, 정치적 관심도 및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정치적 관여(political engagement)와 함께 동

원의 네트워크(network of recruitment)를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Verba et al 1995). 개인의 결사체 활동은 정치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계기가 되며, 회원과의 연대감 혹은 회원들로부터의 압박 등의 이유로 인해 조직에 속한 개인의 투표 혹은 시위와 집회참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즉 개인은 홀로 고립된 것보다 직장동료, 친구 등과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수록 정치참여를 위한 강한 동기와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합리적 선택 이론의 집합행동의 딜레마는 결사체에 속한 개인은 시위나 집회와 같은 집합행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무임승차(free-riding)의 동기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선을 위한 집합행동의 참여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결과 사이의 함수로 본다면, 개인은 비용 지출 없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공공재 이익의 수혜자가 될 때 최선의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올슨은 정치참여라는 집합행동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 제공과 조직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Olson 1965). 그러나 개인이 단순히 선택적 유인만으로 집합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으며(Udehn 1996), 분노와 불만 같은 감정적 요인은 조직의 소속 유무를 떠나 시위나 집회 같은 집합행동을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다(이현우 2017). 또한 조직에 속한 개인은 리더의 동원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헌신감과 이념적 이익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사체에 속한 개인이 선택적 유인이나 조직 리더의 동원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여기서 사회자본론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적 덕(virtue)이 산출되는 결사체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한다. 개인의 정치참여 동기는 도구적 행위(participation as instrumental action)와 상호작용의 과정(participation as interaction)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Scaff 1975). 즉 개인은 단순히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사체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신념의 공유 등의 참여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어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론은 결사체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호혜적인 규범과 신뢰의 제고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증진

시키고, 그 결과로 집합행동의 딜레마가 극복되어 정치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utnam 2001). 사회적 자본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Newton 1999; Putnam 2001).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규범의 형성을 통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 구축, 시민사회의 활성화, 다양한 시민참여를 추동하는 주요한 요소로 이미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송경재 2010).

사회자본론에서 말하는 결사체 활동의 정치참여 확장 가능성은 시민적 덕성이 호혜적 관계의 조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 즉 결사체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호혜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덕(civic virtue)을 산출하여 정치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인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신뢰, 관용,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적 덕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개인이 결사체 활동을 통해 시민적 덕을 습득하고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참여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참여민주주의자들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루소(Rousseau), 밀(Mill), 바버(Barber) 등에 의해서 참여 혹은 정치참여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치참여를 통해서 정서적인 측면의 시민의식과 지적인 측면의 정치기능이 학습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결사체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민적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신장시키며,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문제와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감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토크빌(Tocqueville)의 전통을 따르는 사회자본론 역시 결사체 활동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해 왔다. 이들은 교회, 자원봉사단체, 친목클럽 등 사회에서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차되어 증진될 때, 공동 목표를 성취하는 개인의 집합적 능력으로서 시민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은 그 자체로 협동적 능력과 집단적 행위에 필요한 공유된 책임감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사고 및 사회적 믿음과 정치참여 의식의 발현에 기여하며(Almond and Verba 1963), 이러한 시민성의 습득은 개인의 집합적 의사를 정부나 정치권에 투입하는 원천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사회자본론은 시민적 태도인 신뢰가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결사체 활동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혈연에 의한 비공식적이고 일차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결사체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협소한 신뢰(thick Trust)를 배양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장수찬 2004).⁶⁾ 즉 동종의 모임, 단체, 클럽활동이 지연이나 혈연을 중심으로 중첩되어(overlapping) 나타나면 신뢰의 협소성이 강화되고 사회는 분절되며(Paxton 2002), 유사한 그룹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첩 연결은 외부인을 배타시키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Granovetter 1973). 이것은 공식적이고 이차적인 연결망(secondary relations)에 기초한 결사체 활동은 호혜성과 신뢰를 배양할 수 있지만, 비공식적이고 일차적인 연결망(primary relations)에 기초한 결사체 활동은 오히려 배타성 혹은 집단 이기주의를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대변되는 결사체의 순기능은 내부효과와 외부효과로 귀결된다(Newton 1999). 전자는 개인이 결사체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규범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후자는 개인이 무임승차의 욕구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시스템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사체에 참여하는 개인은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해 압력행사, 시위, 성명서 발표 등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자원 봉사 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공존의 가치로 대변되는 시민성을 확대하는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시민성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여 다양한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개인의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과 같은 좋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나쁜 사회적 자본을 배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6) 뉴턴(Newton)은 비공식적이고 일차적인 결사체에서 형성된 신뢰를 “협소한 신뢰(thin trust)”로, 공식적이고 이차적인 결사체에서 형성된 신뢰를 “폭 넓은 신뢰(thick trust)”로 구분했다(Newton 1999).

3.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논의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가?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이끌었는가? 시민성은 촛불집회 참여를 이끌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이 시위나 집회를 포함한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이끌었는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첫째, 결사체 활동과 시위 및 집회참여의 인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결사체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정당, 예술단체, 종교단체의 활동과 비제도적 정치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장수찬(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미국과 스웨덴에 비해 결사체 활동과 진정서 제출 및 시위 참여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당과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 같은 정치적 결사체 활동에 비해 동호회 및 봉사단체와 같은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위와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상돈·김태준 2008; 민영·주익현 2007). 김상돈(2007)의 연구는 친교관계로 연결된 스포츠·레저모임과 동창단체의 활동이 시위나 집회를 포함한 진정서 제출 및 불매운동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비정치적 성격의 결사체 활동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이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에 의해서 매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정당 및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서구의 연구 경향도 확인되었다(Norris et al 2005).

둘째, 시민성과 시위 및 집회참여 간의 인과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신뢰를 정부, 국회, 정당 등에 대한 공적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사회 신뢰로 구분하여, 신뢰의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신뢰가 비제도적 정치참여

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투표 이외의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이혜인·홍준영 2013), 정치인에 대한 높은 신뢰가 시위나 집회를 포함한 광고 불매운동 및 탄원서 서명 등의 저항적 정치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기도 하였다(이정기 2011). 또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시위와 집회참여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송경재 2013; 이양수 2006),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시위와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민영·주익현 2007; 이숙중·유희정 2010). 신뢰와 더불어 공동체의식으로 정의된 호혜성 역시 시위와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송경재 2013).

셋째,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정치참여 유형별 혹은 결사체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등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정치참여와 시민성의 관계를 분석한 버바와 나이(Nie and Verba 1975)의 고전적 연구에 의하면, 국가 간 차이 없이 캠페인 활동과 자치단체 활동은 정치에 관한 심리적 관여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페리와 그의 동료들(Perry et al 1992)의 연구는 집단활동을 포함한 접촉, 항의활동, 캠페인 활동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은 정치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impression)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특히 결사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도출하였다. 한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당, 노동조합, 문화단체, 기타단체의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시민적 덕목과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김상돈·김태준 2008). 박종민·배정현(2008) 연구 역시 종교단체, 스포츠클럽, 향우회 등 18개 유형의 시민사회 내 결사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의 인과성 검증했으나, 결사체 활동은 적극적인 참여자 혹은 소극적 참여자 모두에게 신뢰와 시민적 덕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유재원(2000)의 연구는 봉사단체, 사회운동 단체, 친목단체의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운동 단체의 구성원은 다른 단체의 구성원에 비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다른 단체의 구성원보다 동료시민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과 대학생의 직접적인 NGO 활동 경험과 시민성의 인과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NGO 참여 활동의 시민 교육적 효과를 발견하였다. 정부기관의 협조 하에 조직된 NGO적 성격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은 정치신뢰를 제외한 효능감, 준법의식, 관용, 참여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인 2007). 또한 대학생의 NGO 현장학습 경험은 사회참여 의식과 신뢰의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도묘연 2010).

이상의 논의들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시위나 집회참여를 포함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고, 이러한 영향력이 결사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 함양과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시위나 집회참여에, 그리고 시민성이 시위와 집회참여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만을 분석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개인의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인해 시위와 집회참여를 포함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자본론에서 주장하는 결사체 활동의 순기능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습득되는 시민성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정치참여로 승화될 때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라는 두 번째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오피니언 라이브)에 의뢰해 전국적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비례층화 방식으로 추출하였고,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직후인 2017년 3월 17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일차적으로 2016년 10월 29일(1차)부터 2017년 3월 11일(20차)까지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차 조사대상은 총 1,518명이었고, 이 중 촛불집회에 참여자는 664명, 비참여자는 854명이었다. 둘째, 1,518명의 조사대상 중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 종친회·동창회·향우회, 친목모임, 동호회,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분석대상을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694명이었다.⁷⁾

한편,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 영향과 시민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사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결사체 활동의 유형과 시민성 구성요소의 타당성 검증은 배리맥스(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불어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결사체 활동의 유형과 시민성 구성변수의 일반특성은 평균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나타나는 시민성과 결사체 활동의 유의미한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7) 694명 최종 분석대상의 성별은 남자 441명(63.54%), 여자 253명(36.46%)이었다. 연령은 20대 92명 (13.26%), 30대 110명(15.85%), 40대 150명(21.61%), 50대 173명(24.93%), 60대 이상 169명(24.35%)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1명(18.88%), 경기권 185명(26.66%), 충청권 85명(12.25%), 전라권 78명(11.24%), 경북권 67명(9.65%), 경남권 117명(16.86%), 강원 및 제주권 31명(4.47%)이었다.

2. 분석도구의 타당성 검증: 시민성 및 결사체 활동의 유형화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영향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 구성변수를 유형화하였다. 결사체 활동은 실제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시민성은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 결사체 활동의 요인분석

구분	측정변수	요인1	요인2
정치적 결사체 활동	정당	0.78	0.08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0.71	0.08
	NGO	0.52	-0.27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총친회 · 동창회 · 향우회	0.05	0.67
	취미 동호회	-0.19	0.63
	단순 친목모임	0.07	0.63
고유값(eigenvalue)		1.4537	1.3038
기여율(proportion)		0.2423	0.2173
누적기여율(cumulative)		0.2423	0.4596

*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로 측정함.

<표 1>의 결사체 활동의 요인분석 결과,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가 제1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총친회 · 동창회 · 향우회, 취미 동호회, 단순 친목모임이 제2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II장의 이론적 · 경험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1요인은 정치적 결사체로, 그리고 제2요인은 비정치적 결사체로 명명하였다.

〈표 2〉 시민성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측정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신뢰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믿음	0.91	0.09	0.06	0.01
	정치인 및 공무원이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한다는 믿음	0.88	0.16	0.02	0.00
	다른 사람을 믿는 만큼 보답이 돌아온다는 인식	0.85	0.10	0.16	0.04
참여 의식	주변 지인들과 지역 및 국가의 중요 문제에 관한 토론	0.22	0.78	0.19	0.10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 및 사회 상황에 대해 알려는 노력	0.05	0.77	0.16	0.14
	시민단체 및 동호회에 가입하여 자원봉사 및 취미활동	0.25	0.71	0.09	0.20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의견 개진 및 집회참여	-0.04	0.70	0.28	0.01
관용	가치와 이념이 다른 사람과 동호회 및 자원봉사 활동	0.13	0.23	0.75	0.13
	가치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	0.20	-0.05	0.72	0.27
	가치와 이념이 다른 사람과 정치 및 사회적 현안 토론	0.03	0.36	0.71	0.14
	다수결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비판 허용	-0.04	0.23	0.67	0.03
민주적 의사 결정 태도	집단 내 의사결정은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	-0.10	0.12	0.26	0.75
	집단 내 의사결정시 경쟁보다는 양보나 타협이 중요	-0.02	0.09	0.18	0.72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내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수용	-0.14	-0.13	0.00	-0.71
고유값(eigenvalue)		4.4247	2.1969	1.3613	1.1446
기여율(proportion)		0.3161	0.1569	0.0972	0.0818
누적기여율(cumulative)		0.3161	0.4730	0.5702	0.6520

* 7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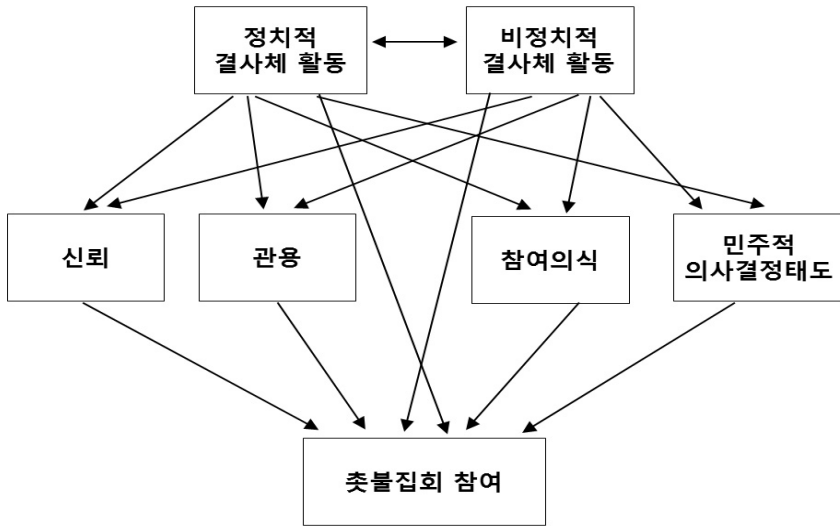
<표 2>의 시민성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시민적 태도로서 시민성은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당초 시민성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관용, 신뢰, 정치참여 의식, 사회참여 의식, 공동체의식으로 구성되었다(도묘연 2010; 이용교·이중섭, 2010).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6가지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설문문항을 리스트 한 후, 측정변수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참여 의식과 사회참여 의식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수들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1요인은 신뢰, 제2요인은 관용, 제3요

인은 참여의식 그리고 제4요인은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로 정의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3. 분석모형의 구축

이 연구의 목적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내생변수는 촛불집회 참여이고, 외생변수는 결사체 활동이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시민성은 결사체 활동에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이자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이다.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8) 이 연구는 2016년-2017년 촛불집회를 분석한 저자의 다른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저자가 이 연구의 일차적인 조사대상이었던 촛불집회 참여자(664명)와 비참여자(854명)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득, 고용형태), 감정적 요인(분노, 참여효능감, 대통령 국정수행 불만족), 정치적 정향(이념, 지지정당), 평상시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민주주의 만족도, 결사체 활동, 정치참여 방식, 미디어 이용, 신뢰)의 변수들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사체 활동은 4가지 차원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촛불집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도묘연 2017). 따라서 이 연구는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과 함께 결사체 활동의 시민성 함양 효과 및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매개로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효과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 분석모형(제안모형)

외생변수인 결사체 활동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요인분석 결과와 II 장에서 제시한 사회자본론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로 구성된 정치적 결사체는 공식적이고 이차적인 관계에 의해서 조직되었다는 특징을 가지며, 연대적 이익과 함께 물질적 혹은 이념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단순 친목단체 및 취미 동호회로 구성된 비정치적 결사체는 비공식적이고 일차적인 유대에 기초해 형성되었으며, 친교 및 재미 같은 연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편, 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양자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모형(제안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생변수인 촛불집회 참여는 촛불집회 참여 횟수로, 결사체 활동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로 측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시민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관용, 참여의식,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로 구성하였다.

〈표 3〉 분석변수의 정의와 척도

구분	변수명	측정 변수	척도
내생변수	촛불집회 참여	촛불집회 참여 횟수(0회에서 20회)	비율
외생변수	정치적 결사체 활동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종친회·동창회·향우회, 취미 동호회, 단순 친목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	
매개변수	시민성	신뢰, 관용, 참여의식,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7단계 리커트

IV. 실증분석

1.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표 4>는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694명 분석대상의 촛불집회 참여 횟수, 결사체 활동 및 시민성의 일반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694명 중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별로 나타난 일반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고 있다. 694명 중 촛불집회 참여자는 349명, 비참여자는 345명이었다. 349명 촛불집회 참여자의 평균 참여 횟수는 2.74회였고,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20회까지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⁹⁾

우선 결사체에 가입하는 활동하는 694명의 결사체 활동 및 시민성의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결사체 가입수는 3.60개였고, 이 중 정치적 결사체 0.42개, 비정치적 결사체는 3.18개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결사체 가입수는 정

9) <각주 표 1> 촛불집회 참여 횟수별 참여 인원

(단위: 회, 명, %)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0	345 (49.71)	3	68 (9.8)	6	5 (0.72)	10	11 (1.59)	15	1 (0.14)
1	129 (18.59)	4	11 (1.59)	7	4 (0.58)	11	1 (0.14)	20	1 (0.14)
2	82 (11.82)	5	32 (4.61)	8	2 (0.29)	12	2 (0.29)		

당이 0.17개, NGO 0.15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0.10개였고,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수의 경우는 취미동호회가 1.22개, 종친회·동창회·향우회 1.05개, 단순 친목모임 0.90개였다. 따라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사체 활동보다는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둘째, 시민성의 전체 평균은 4.59였다. 이 중 관용(5.04)이 가장 높았고, 그 다

〈표 4〉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구분	전체 (N=694)	참여자 (N=349)	비참여자 (N=345)	χ^2/t
촛불집회 참여 횟수*	1.38	2.74	0.00	$t=20.84$, prob=0.0001
결사체 가입수	3.60	3.50	3.70	$t=-0.79$, prob=0.4318
정치적 결사체*	0.42	0.57	0.26	$t=3.93$, prob=0.0001
정당*	0.17	0.21	0.13	$t=1.60$, prob=0.1104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0.10	0.14	0.06	$t=3.21$, prob=0.0014
NGO*	0.15	0.22	0.08	$t=3.51$, prob=0.0005
비정치적 결사체	3.18	2.93	3.43	$t=-2.14$, prob=0.0328
종친회·동창회·향우회	1.05	1.05	1.05	$t=0.04$, prob=0.9673
취미 동호회*	1.22	1.07	1.39	$t=-2.75$, prob=0.0061
단순 친목모임*	0.90	0.81	1.00	$t=-1.82$, prob=0.0687
시민성	4.58	4.65	4.51	$t=2.82$, prob=0.0050
신뢰	3.51	3.58	3.45	$t=1.19$, prob=0.2344
참여의식	4.77	4.87	4.67	$t=2.88$, prob=0.0041
관용	5.04	5.14	4.94	$t=2.89$, prob=0.0039
민주적 의사결정 태도	4.78	4.77	4.79	$t=-0.54$, prob=0.5920

* 등분산 가설이 기각된 경우임.

10) 69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전체 결사체 수는 2,498개였다. 정치적 결사체 수는 290개였고, 이 중 정당은 118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는 68개, NGO는 104개였다. 그리고 비정치적 결사체 수는 2,208개였고, 이 중 종친회·동창회·향우회는 730개, 취미 동호회는 850개, 단순 친목모임은 628개였다.

음 순이 민주적 의사결정태도(4.78), 참여의식(4.77), 신뢰(3.51)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수용하려는 관용의식은 높았으나,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장수찬 2002).

다음으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694명 중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별로 나타난 결사체 활동 및 시민성의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결사체 가입수는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수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치적 결사체 가입수(참여 0.57개 대 비참여 0.26개)는 참여자가 많았으나,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수(참여 2.93개 대 비참여 3.43개)는 비참여자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와 NGO의 가입수(참여 0.14개, 0.22개 대 비참여 0.06개, 0.08개)는 참여자가 많았으나, 동호회와 친목모임의 가입수(참여 1.07개, 0.81개 대 비참여 1.39개, 1.00개)는 비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서 정치적 결사체 중에서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및 NGO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단순 친목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시민성은 촛불집회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시민성(참여 4.65 대 비참여 4.51)은 참여자가 높았고, 참여의식과 관용(참여 4.87, 5.14 대 비참여 4.67, 4.94) 역시 참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뢰와 민주적 의사결정태도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비참여자에 비해 평소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많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정치적 관여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1)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표 5>는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에 의해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와 시민성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제안모형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는 $\chi^2=281.146$, $df=6$, $Prob=0.001$, $GFI=0.895$, $RMR=0.121$, $NCP=275.146$ 이고,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는 $AIC=325.146$, $PGFI=0.192$, $PNFI=0.099$, $RMSEA=0.257$ 이다. <표 5>의 제안모형의 추정결과는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와 간명적합지수의 수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별 경로의 표준추정 계수의 유의성은 15개의 경로 중에서 9개 경로에서만 확인되었다.

<표 5> 제안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ob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신뢰	0.089	0.053	2.362	0.018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참여의식	0.217	0.033	5.931	0.001
정치적 결사체 활동 → 관용	0.090	0.034	2.380	0.017
정치적 결사체 활동 →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0.045	0.023	-1.188	0.235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촛불집회 참여	0.272	0.079	7.301	0.001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신뢰	0.065	0.018	1.719	0.086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참여의식	0.164	0.011	4.468	0.001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관용	0.108	0.012	2.877	0.004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0.065	0.008	1.719	0.086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촛불집회 참여	-0.023	0.027	-0.631	0.528
신뢰 → 촛불집회 참여	-0.023	0.055	-0.648	0.517
참여의식 → 촛불집회 참여	0.110	0.087	2.942	0.003
관용 → 촛불집회 참여	-0.017	0.085	-0.476	0.634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 촛불집회 참여	-0.014	0.128	-1.121	0.262
정치적 결사체 활동 ↔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0.129	0.121	-1.065	0.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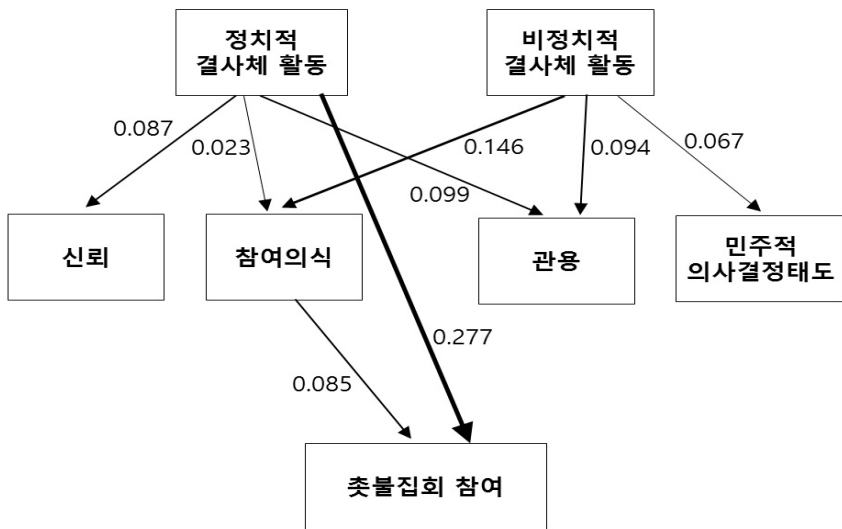
따라서 제안모형에서 개별 경로의 유의성이 낮았던 경로구조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하여 수정모형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즉 관용과 촛불집회 참여,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촛불집회 참여, 신뢰와 촛불집회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와 촛불집회 참여, 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신뢰,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그리고 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의 상관성 경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표 6〉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

비교기준		수용기준	제안모형	수정모형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chi^2(df)$	-	281.146(6)	9.615(7)
		p-value	p>0.05	0.001	0.211
		적합지수(GFI)	>=0.9	0.895	0.996
		평균오차제곱근(RMR)	<=0.05	0.121	0.068
		비중심성지수(NCP)	최소값	275.146	2.615
	충분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AGFI)	>=0.9	0.510	0.984
		표준적합지수(NFI)	>=0.9	0.347	0.978
		비교적합지수(CFI)	최대값	0.328	0.994
	간명적합지수	아카이계 정보기준(AIC)	최소값	325.146	51.615
		간명적합지수(PGFI)	>=0.9	0.192	0.249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0.9	0.099	0.326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05	0.257	0.023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 (유의/전체)	53.3% 15(9)	100% 8(8)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한 <표 6>에 의하면, 수정모형은 제안모형과 달리 절대적합지수의 $\chi^2(df)$, GFI, RMR, NCP 기준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 또한 간명적합지수의 AIC, PGFI, PNFI, RMSEA의 기준에서도 수정모형이 제안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전반적인 개선정도를 파악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의 경우도 AGFI, NFI, CFI의 수치는 수정모형이 제안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역시 제안모형은 전체 경로의 53.3%가 유의미한 것에 비해서 수정모형은 추정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 집회 참여의 경로구조는 [그림 2]의 수정모형에 의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수정모형

2) 수정모형의 추정결과

<표 7>는 수정모형에 의해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 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와 시민성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경로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결사체 활동 차원에서의 경로구조를 살펴보면,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신뢰에 0.087($t=2.289$), 참여의식에 0.023($t=6.134$), 관용에 0.099($t=2.710$)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에 0.277($t=7.487$)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에 0.146($t=4.147$), 관용에 0.094($t=2.563$)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에 0.067($t=1.76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었으나, 비정치

적 결사체 활동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었고, 두 유형의 결사체 활동은 공통적으로 참여의식과 관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민성 차원에서의 경로구조를 살펴보면, 참여의식은 촛불집회 참여에 0.085($t=2.306$)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신뢰,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태도가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체의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하려는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수정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표준추정치	표준오차	t값	prob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신뢰	0.087	0.053	2.289	0.022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참여의식	0.023	0.033	6.134	0.001
정치적 결사체 활동 → 관용	0.099	0.033	2.710	0.007
정치적 결사체 활동 → 촛불집회 참여	0.277	0.079	7.487	0.001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참여의식	0.146	0.011	4.147	0.001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관용	0.094	0.011	2.563	0.010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0.067	0.008	1.766	0.077
참여의식 → 촛불집회 참여	0.085	0.086	2.306	0.021

<표 7>의 수정모형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과 시민성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경유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8>을 통해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와 두 가지 유형의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간접적인 효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수정모형의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총 효과는 0.279였다. 이 중 직접효과는 0.277, 참

여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002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를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변수인 동시에 참여의식을 경유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변수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 활동을 많이 할수록 참여의식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참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촛불집회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총 효과는 0.012였다. 이 중 직접효과는 없었고, 참여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이 나타났다. 즉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으나, 참여의식을 경유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따라서 종친회·동창회·향우회, 취미 동호회 및 친목모임 활동을 많이 활동할수록 참여의식이 향상되었고, 그 결과로 촛불집회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수정모형의 총효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치적 결사체 활동	촛불집회 참여	0.279	0.277	0.002*
정치적 결사체 활동	참여의식	0.023	0.023	0.000
	촛불집회 참여	0.085	0.085	0.000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촛불집회 참여	0.012	0.000	0.012**
비정치적 결사체	참여의식	0.146	0.146	0.000
	촛불집회 참여	0.085	0.085	0.000

* 0.002=0.023(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참여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0.085(참여의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

** 0.012=0.146(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참여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0.085(참여의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 결사체 활동의 긍정적인 기능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함양시

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결사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시민성은 시민들의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결사체의 순기능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 결사체 활동의 시민교육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신뢰, 참여의식, 관용에, 그리고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성 함양 기능은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개별 경로의 표준 추정치의 절댓값에서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참여의식과 관용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결사체 활동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성이 함양될 수 있다는 사회자본론의 규범적·경험적 주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사회자본론은 비공식적 관계에 기반을 둔 일차적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즉 동종의 모임, 단체의 활동이 지역이나 혈연과 같은 내부적 결속을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협소한 신뢰(thick trust)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착자본(bonding capital)은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혈연, 학연, 지연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결사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이들 단체 회원의 일반 신뢰가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장수찬 2004). 이 연구는 일차적 유대에 기초한 결사체의 활동이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참여의식을 포함해 관용과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의 향상이라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비공식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민사회 내 결사체 역시 공동체 문제와 동료 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정치적 결사체에서만 확인되었다. 표준 추정치의 절댓값에서도 모든 경로 중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일차적인 유대를 기초해 형성된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직접적으로 추동하지 못했다. 반면,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의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직접적으로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동호회, 봉사단체와 같은 비정치적 결사체의 활동이 시위와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김상돈·김태준 2008; 민영·주익현 2007), 정당 및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참여가 활발하다는 서구의 경향과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Norris et al 2005).

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2016-2017년 촛불집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일정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NGO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 공식적 결사체의 활동이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이끌었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사체는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 조직의 구성원 및 일반 시민들을 사회운동 혹은 저항집회로 이끌어 거대한 동원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물론 2016년-2017년 촛불집회 경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도 집회 동원의 주변자로서 머물러 있었고, 특정 조직의 동원적 성격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참여를 촉진한다는 이론적·경험적 주장처럼,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분명 촛불집회의 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기회와 계기를 제공하는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정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의 참여 활동은 향후 촛불집회를 포함해 평화적 시위와 집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즉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을 증진시켰고, 참여의식이 증진된 결과로 개인의 촛불집회 참여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직접적으로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결사체 활동과 더불어 일차적인 유대에 기초한 생활 속의 결사체 활동 역시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결사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직 차원의 동원이 없었음에도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즉 평상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결사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은 다양한 조직 활동 및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의식을 습득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참여의식이 증진된 결과로 인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당,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 NGO에서 활동은 그 자체로 혹은 참여의식의 함양을 통해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였다. 반면, 촛불집회에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였다. 따라서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및 친목모임의 활동은 촛불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를 직접 추동하지 않더라도, 참여의식의 향상을 통해 잠재적으로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내포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한계

지금까지 이 연구는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2016년-2017년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와 시민성을 매개로 하여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결사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직적 동원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시민성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정치적 및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신뢰, 참여의식, 관용의식의 함양에, 그리고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참여의식,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태도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치적 결사체 활동은 촛불집회 참여를 촉진하는 직접적 효과와 참여의식을 경유하여 촛불집회 참여를 추동하는 간접적 효과가 동시에 있었으나,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의 경우는 참여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만 발견되었다. 그리고 직접효과는 정치적 결사체 활동에서 강하게 나타났

던 반면, 간접효과는 비정치적 결사체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결사체 활동이 시민교육적 효과 및 촛불집회 참여의 유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결사체 활동을 통해 참여의식을 축적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발적 결사체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학교다”는 토크빌(Tocqueville)의 주장처럼, 결사체는 시민적 덕을 산출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또한 결사체 활동은 시민성 함양을 통해 잠재적으로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 향상과 평화로운 시위나 집회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특히 2016-2017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시위나 집회가 시민들의 의사표현 방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결사체 활동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 활성화는 건전한 시위와 집회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로운 진행으로 대장정을 마친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거리 정치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집회와 시위가 보편적인 정치참여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촛불집회 직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7.1%는 “집회가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60.3%는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대답하였다(아시아 경제 17/04/25).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결사체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교육적 방안을 모색하여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의 보편화에 필요한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동호회, 친목모임과 같은 생활 속의 결사체 활동 역시 시민성 함양을 통해 건전한 시민사회와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사회자본론에서는 비공식적인 유대를 기초로 형성된 결사체를 나쁜 사회적 자본이 배양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결사체 활동 역시 시민적 덕성을 산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위와 집회와 같은 정치참여를 유인한다는 점을 확인시

켜 주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변에서 가깝게 형성된 수많은 결사체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사체 구성원들 간의 좋은 감정과 유대는 시민적 덕을 배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기반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연구방법상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결사체 활동을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로 측정한 것은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정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사체에서 활동하는 개인이 시민성을 습득한 결과로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는 가설의 유효성은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 받은 적이 없는 결사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즉 분석대상을 결사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 결정과 판단만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로 설계했어야 했다. 결사체 활동과 시민성의 인과 관계 분석 역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수와 함께 가입 동기, 만족감, 활동 내용 등의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결사체의 유형화는 시민사회 내 모든 결사체를 포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은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결사체 활동이 시민성과 촛불집회 참여에 미치는 경로구조 분석은 다차원적인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정치적 정향과 사회경제적 변수 등 촛불집회 참여 혹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포함한 경로모형을 구축했다면 연구타당성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발견한 분석결과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과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효림. 2015. “결사체주의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민주주의적 의의: 마포파티 (Mapo Part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집 5호, 151-180.
- 금보령. 2017. “국민77% 집회 영향력 과거보다 커…촛불집회가 바꾼 인식.” 『아시아경제』 (4월 25일).
- 김 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권 2호, 27-59.
- 김상돈. 2007. “정치참여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미·일 국제비교연구: 비정치적 결사체 가입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1집 1호, 221-255.
- 김상돈·김태준. 2008. “자발적 결사체 가입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효능감과 시민권 덕목의 매개효과분석.” 『사회과학연구』 16집 1호, 68-113.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권 6호, 99-127.
- 나은경. 2007.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이질성 인식 수준에 따른 다양성과 민주적 시민태도의 다면적 관계.”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63-189.
- 노형일·양은경. 2017. “비폭력 저항 주체의 형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통치 분석.” 『한국방송학보』 31권 3호, 5-41.
- 도묘연. 2010. “NGO 참여 활동의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21세기정치학회』 20집 2호, 77-100.
- 도묘연. 2017. “2016년 -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의정연구』 23권 2호, 1-37.
- 민영·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190-218.
- 박종민·배정현. 2008. “한국에서 단체는 민주주의의 학교인가?: 단체참여의 내부효과.”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121-141.
- 백육인. 2008. “촛불시위와 대중: 정보사회의 대중형성에 관하여.” 『동향과 전망』 74호 159-188.
- 송경재.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시민참여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동학.” 『국가전략』 16권 4호, 125-150.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221-244.
- 유재원. 2000. “사회적 자본과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권 3호, 23-43.
-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9권 1호, 95-119.
- 이숙중 ·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287-313.
- 이승중. 1997. “한국 정치사회의 전개와 시민성의 과제.” 조영달 편. 『한국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서울: 교육과학사.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 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25-43.
- 이용교 · 이종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사회참여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권 2, 203-232.
- 이정기. 2011.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신뢰도,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이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 경험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8호, 74-109.
- 이준한. 2009. “촛불, 매스 미디어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17집 1호, 264-290.
- 이지호. 2017. “박근혜 촛불, 누가 왜 참여했다.” 한국선거학회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서울. 4월.
- 이현우. 2008.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서울. 8월.
- 이현우. 2017. “촛불집회 참여강도 분석: 정체성, 분노, 효율성.” 한국선거학회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서울. 4월.
- 이혜인 · 홍준영.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권 3호, 791-820.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87-112.
- 장수찬. 2004. “한국 연줄사회조직의 특성과 신뢰구조의 이해: 이중적 신뢰구조가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22집 2호, 359-394.
- 조기숙 · 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243-268.

-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39권 4호, 135-161.
- 한기덕. 2012. “한국사회 집회·시위문화의 변동과 특징: 역사적 맥락에 따른 그 유형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서울. 6월.
- 허인숙·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권 1호, 443-472.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No. 6, 1360-1380.

Hirst, Paul. 1993. *Associ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Kaase, Max and Alan Marsh. 1979. “Politic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Samuel H. Barnes, ed.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London: Sage.

MacIver, Robert. 1970. *On community, society, and power: Selected Writ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ilbrath, La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neth Newton and Paul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Nie, Norman H. and Sidney Verba. 1975. “Political Participation.” Fred I. Greenstein,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Political Science Vol. 4. Nongovernment Politics*.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pp. 1-74.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ris, Pippa. Stefaan Walgrave and Peter Van Aelst. 2005. “Who Demonstrates? Antistate Rebels, Conventional Participants, or Everyone.” *Comparative Politics* 37, No. 2, 189-205.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ry, Geraint, G. Moyser and N.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amela.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dependent Relationshi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No. 2, 254-277.
- Print, M and D. Coleman. 2003. "Towards Understanding of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Education."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3, No. 1, 123-149.
- Putnam, Robert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caff, Lawrence A. 1975. "Two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 No. 3, 447-462.
- Schulz, W., J. Ainley, J. Fraillon, D. Kerr and B. Losito. 2010. *ICCS 2009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Amsterdam. The Netherlands: IEA.
- Tarrow, Sidney and Charles Tilly 2007. "Contentious Politics and Social Movement."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onnies, Ferdinand. 1957. *Community and Society*. translated by Charles P. Loomis. New York: Haper & Row
- Udehn, Lars. 1996. *The Limits of Public Choice*. New York: Routledge.
- Verba, Sidney, Kay Schol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grave, Stefaan and J. Manssens. 2000. "The Making of the White March: The Mass Media as a Alternative to Movement Organization." *Mobilization* 5, No. 2, 217-239.
- Walker, Jack L. 1991.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th structure of association activity, citizenship and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tion

Do, Myo Yuen |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al structure of association activity and citizenship on the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 from 2016 to 2017. The associations were defined as political association including parties, unions, social organizations, NGO, and non-political association including family associations-alumni associations-hometown alumni, clubs, and fellowship groups. Data was collected by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who are active in the association. As a result, first, political and 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were the direct factors promoting citizenship. Second, 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s on promoting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tion and indirect effects on encouraging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tion through participation consciousness. However, 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ies showed only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participation consciousness.